

기호 9

공약순위 1 : 권력구조 개편 및 정치 개혁

- 목표
 - 승자독식 정치 구조를 깨뜨리겠습니다.
 -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는 정치를 하겠습니다.
 -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
 -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실시
 - 헌법개정국민회의 구성(새정부 출범 1년 내) 2023년 국민투표 실시
 -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동시선거 통해 제7공화국 출범
 - 제20대 대통령은 임기를 2년으로 단축
 - 청와대·정부 권력은 줄이고 내각 중심으로 국가운영
 -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
 -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→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(5천원) 지급하여 지지정당에 후원
 -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, 국민소환제 도입, 면책특권 폐지
 - 국회의원 보수 제한(중위소득 1.5배) 보좌관 수 감축 등 국회의원 특권 개혁
- 이행기간
 - 2023년 국민투표 개헌 통한 정치개혁 마무리
- 재원조달방안 등
 - 국고 증액(개헌 위한 국민투표 실시)

공약순위 2 : 공공부문·관료 개혁

- 목표

- 관료 개혁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.
- 공공부문 엘리트 순혈주의를 혁파하겠습니다.
- 철밥통 공기업을 개혁하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 폐지
 - 일반 행정 공무원 수 과감히 감축(퇴직 공무원 20%만 허용)
 -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
 - 공무원 직급을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
 - 7급 공무원 일정 비율은 사회적 약자에 할당
 - 토지·건축 인허가 시민배심원제 도입
 - 규제담당 공무원 대폭 감축
 - 공공부문 전관예우 폐지로 관피아·공피아 타파
 - 공공기관 일몰제 도입
 - 정보비대칭성 해소 위한 정책과 통계정보 투명한 공개
 - 법조계 엘리트 인사시스템 개혁
 - 대규모 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민영화·구조조정·경영혁신 단행
 -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업별 혁신 프로그램 지원
 - 정부의 인사개입과 낙하산 최소화(전문성 중심으로 인산)
 - 내부 복지제도 및 인사는 성과중심으로 전환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까지
 - 2024년(3년 간) 외부 경영진단 후, 혁신프로그램 지원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본예산 증액 및 기금 증액
 - 경영진단 비용은 각 공공기관별 각출

공약순위 3 : 국가균형발전

- 목표

- 수도권 1극 체제를 전국 5극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(5개 서울 만들기).
- 어디에 살든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
- 전 국토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5개의 서울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
 - 수도권(강원)·부울경·대구경북·대전충청·광주호남
 - 중앙과 지방 간 재정균형을 위한 '재정연방제' 도입
 - 지자체에 규제 자율권 등 경제행정권을 부여
 - 지역개발, 복지, 문화, 교육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방이 결정
 - 소득세·법인세에 공동세를 도입, 부가세 지방 비중 확대
 - 충청 이남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추가감면
 - 이전할 경우, 10년 고용유지 조건으로 상속·증여세 획기적 감면
 - 수도권 대학 지방이전으로 인재균형 달성
 -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, 사립대 이전 인센티브 제공(취득세·상속·증여세 등)
 - 의대·약대·바이오·AI 등 정원 확대와 공기업 인재 선발 50% 채용 인센티브
 - 지방의료기관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생활균형
 - 지방대학 병원 수준 크게 향상,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바우처 제공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 (5년간)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직접적 재정지출 없음(지방이전 기업·대학 등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변동)

공약순위 4 :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대책

- 목표
 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신속·과감·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.
 - 기술경쟁력 있는 세계적 강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즉각적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(2022년)

- 예산(607조원) 중 재량지출 10% 구조조정으로 즉시 30조원 마련
 - 구조조정 대상은, 지역구 선심성 예산 및 유사·중복사업 중심
 - 거대양당 합의만 하면 재정건전성 해치지 않으면서 해결 가능
- 지원방식은 <先지원 後정산>으로 과감하게 지원
- 현재 손실보상률: 80% → 100%로 지원 확대
- 손실보상금 부족 할 경우, 국채발행으로 충분하게 지원
 - 국채발행 규모만큼 2023년도 예산편성에 SOC·지역구 선심성 예산 동결
- 중소·중견기업 글로벌 비즈 플랫폼 구축
- 혁신 스타트업 10만개 육성,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
 -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까지 규제개혁·금융·세제 집중지원
 - 청년 창업지원센터 확대 설치(아이디어만으로 입주 및 지원)
- 규제개혁청 신설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
 - 모든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(금지되는 것 외 모두 허용) 전환
- 벤처기업 실패 안전망의 탄탄한 확충
 - 대출에 따른 관행적 연대보증 폐지(기술 신용보증제도 활성화)
 - Death Valley 특별 펀드 조성
- 벤처육성을 위한 경제3법(상법·공정거래법·금융복합기업집단법) 개정
 -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가맹 하도급 분야 획기적 개선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손실보상 부족분에 따라 국채발행
 - 본예산 증액 및 관련 기금 확충

공약순위 5 : 보편적 소득안전망·저출산고령화 대책

- 목표
 -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공적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.

-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보장제도 확립
 - 동일한 피해 및 수요 있을 시, 차별없이 지원 반면 필요가 다르면 차등지원
 - 소득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, 전국민 고용안전망 및 기회복지안전망 구축
 - 공적연금 개혁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
 - 정권별 연금 폭탄 돌리기 방지책 마련
 - 다층소득체계 구축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
 - 국민연금과 직역연금(군인·공무원·사학) 간 연금소득 격차 적정화
 -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 및 국가책임 강화
 - 재원부담 기준 공적연금법에 규정
 - 개별법 급여의 3자부담원칙 규정
 - 국가·고용주·근로자 부담기준 시행령 위임
 - 현재 ‘저출산고령화 위원회’를 저출산 위원회로 분리
 - 다자녀 가구·부모봉양 가구에 분양가점제 대폭 적용
 - 有자녀 부모의 일자리 교육·훈련·정보 등 국가지원
 - 다자녀 가구 대상, 의료·교통·문화·예술 등 예약·대기 시 요금 인하 및 급행(Express)창구 활용 등 일상적 혜택
 - 고령자의 공동체 생활 지원 확대
 - 고독처 신설로 고독사를 예방·관리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본예산 증액 및 관련 기금 확충

공약순위 6 : G10 대한민국 만들기

- 목표
 - 글로벌 리더십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

- 실리외교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
-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글로벌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
 - 디지털 청년 인재 10만명 육성, 중소·중견기업 글로벌 무역 확장
 - 디지털 통상협정 적극 추진
 - Mega FTA: CPTPP, USMCA, USJDTA, ASED, DEPA 등
 - 세계5대 디지털 통상강국
 - 기업역량·정부통상·4차산업 기술 → 디지털 기반 국제협력과 협상 주도
 - 디지털 통상규범 선제적 대응
 - 국익우선 실리외교와 글로벌 가치중심의 전략추진(경제·외교·안보)
 - 미국(안보)-중국(경제) 분리구조 탈피(외교의 정치화 탈피)
 -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대처 및 선도적 대응
 - 美中문제, 코로나, 기후위기, 글로벌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 대응
 - 자유민주주의 원칙 하에 평화적 남북대화 지속
 - UN제재와 무관한 한민족 공동체 문화교류 추진
 - UN제재 허용범위 내, 개성공단 국제 컨소시엄 제안·추진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본예산 증액 및 관련 기금 확충

공약순위 7 :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

- 목표
 - 나라를 망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
 - 확실한 규제개혁으로 안정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생애 첫 주택구입자 및 주택실수요자 금융 우대 지원

- <최초 주택구매자> 개념 도입, 주택구입비용 대폭 지원
- 150만호 주택공급
 - 보존가치 떨어진 그린벨트(3등급 이하) 공공부지 택지개발
 - 단, 사회·정책적 차원에서 청년·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 우선 분양
 - 민간주택 수준의 주택공급으로, 토지임대부 분양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
 - 재개발·재건축 규제완화 통한 '미니뉴타운' 건설로 신속한 주택공급
- 예측가능한 공급과 인·허가 관련 신속총괄행정(fast track) 시행
- 고도제한 및 용적율 상향 조정 등 주택건설 규제완화
- 종합부동산세 개편
 - 1가구 1주택자 15년이상 보유, 10년 이상 거주시, 종합부동산세 면제
 - 현행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→ 15억으로 상향
 - 일정 소득 이하 고령의 1주택자는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제도 도입
 - 현행 12~15억, 50~94억 과표구간 세분화로 주택보유 수 비례 부담증가
 - 다주택자 세부담의 전년대비 증가율 연간 상한선은 현행 300%에서 조정지역 2주택자는 200%, 3주택 이상자는 250%로 인하
- 양도소득세 개편
 - 1가구 1주택자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이상 거주 시, 양도소득세 세율 일괄 10% 적용, 2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, 전액 감면
 -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현행 양도세 중과 2년 유예
 - 2년 유예기간 종료 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5%p 상향

공약순위 8 : 교육개혁

- 목표
 -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을 하겠습니다.
 - 교육격차 해소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
 - 초·중·등 교육, 시·도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

- 교육부 폐지 후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
- 교육위원회 위원: (임기) 10년 (구성) 산업계·교육전문가·교육수요자 주축으로 구성
-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(대학)교육재정교부금 신설로 대학재정 확충
- 취업·교육·기회 3대 할당제 도입
 - 지역인재할당제 확대, 대학입시할당제 도입, 고졸채용할당제도 도입
- 교육 ‘메기’를 통한 교육혁명 전환
 - 누구나·언제나·어디에서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
- 대학교육 지원방식을 ‘대학지원’에서 ‘학생지원’으로 전환
- 대학진학 문을 넓히는 입시제도
 -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내신 중심/수시 단순화
 - 수능 2회 실시(고득점 제출), 중장기적으로 수능 자격시험화, 국공립대 일정비율 추첨제, 사립대 입시 자율화
- 미래인재 육성과 대학경쟁력 제고
 - 거점대학 중심 국공립대 통폐합·특성화·학과 구조조정(서울대 수준 육성)
 - 서울대 학부 지방이전 및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이전 유도(세제 혜택 등)
 - 사립대 경상비 지원 점진 축소, 등록금·학과설치·정원 자율 등 운영 자율화
 - 교육재단의 자산처분을 일부 귀속 허용하는 사립대 구조조정
 - 지방대 특성화로 강소대학 육성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직접적 재정지출 없음(지방이전 대학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변동)

공약순위 9 : 청년 5대 권리장전

- 목표
 - 청년의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.
- 이행방법

- 첫째, 안전할 권리보장
 - 여성의 생활안전 보장
 -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미래 국가부채의 한도를 제한
 - 모든 학자금 대출상환 시점을 취업시점으로 조정
 - 군 의무복무 기간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고, 보험료는 국가부담
- 둘째, 일할 권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
 - 청년 취업·창업 투자를 위한 ‘청년 기회바우처’를 지원
 - 4차산업혁명기술을활용하여청년스타트업창업및창직위한‘청년규제샌드박스’ 신설
 - 청년 스타트업 취업자 일자리 보장제 실시
- 셋째, 주거기본권 보장
 -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하고, 청년 우선 배정
 - 중위소득 이하 청년가구(1인 가구 포함) 생애 첫주택 장기모기지론 이자 부담 지원
 - 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청년·신혼부부 우선 입주권 제공
- 넷째, 자기계발권 보장
 - 졸업 후 1년까지 ‘청년패스권’ 발급, 전국 공공 지식인프라 무료이용 지원
 -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도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, 학자금 융자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취업·창업 학습자금 지원
- 다섯째, 정책참여 제도화
 - 청년 후보자의 총선 기탁금 50%로 조정
 - 미래세대 직접영향 미치는 정책추진 시, ‘청년심의회’ 구성·결정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직접적 재정지출 없음(지방이전 대학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 변동)

공약순위 10 : 선진과학기술·4차산업혁명 대책

- 목표
 - 다양성·자율성 下, 과감한 R&D투자로 추월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10대 산업 초격차 분야로 기술강국으로 우뚝 서겠습니다.
 - 디지털 플랫폼 확장·그린혁신경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.
- 이행방법
 - 다양성 및 자율성 하에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 확립
 - 국가경제 존망 걸린 대규모 R&D 획기적 투자(한국형 Moonshot 프로젝트)
 - 과학기술분야 연구대학, 교육대학, 산학협력 등으로 특화
 - 미래 먹거리 10대 산업 초격차 분야에 대대적 투자
 - 초격차 Big10: AI반도체, 배터리(2차전지), 바이오, 미래차, 수소산업, 양자 컴퓨터, 퀀텀디스플레이, 6G, 차세대 모듈원전(SMR), 플렉시블OLED
 - R&D 인프라 구축과 해외인재 영입, 재정·세제지원, 규제개혁을 통한 생태계 조성
 - 추격·우위유지 분야(4차산업)에도 기술패권을 위한 R&D지원 확대
 - AI, IoT, 로봇, 블록체인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5G, 메타버스 등
 -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확대
 - 플랫폼 경제의 글로벌 확장성을 높이는 데 지원 강화
 -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업에 총력지원
 -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기준으로 개혁
 - 생산자, 플랫폼사업자, 플랫폼노동자 간 상생모델 개발·지원
 - 소·부·장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(기존투자 확대)
 - IP R&D(지식재산기반 R&D) 의무화 → 글로벌 특허전쟁 대비
 - 반도체, 바이오, 미래차 등 중점 지원 대상 100개
 - 탄소중립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활성화·촉진 및 R&D 지원
- 이행기간
 - 2022년 ~ 2026년
- 재원조달방안 등
 - 본예산 증액 및 기금확충

